



2025.12.9 제25-89호

KOTRA 워싱턴 D.C. 무역관

KOTRA 워싱턴 D.C.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(화/목) 배포합니다.



▣ 주요 내용

⌚ 워싱턴 D.C. 포커스

- (USMCA) 美, 2026년 USMCA 재검토 주요 일정 및 이해관계자 주요 의견 2
- 공청회·USTR 보고서 등 주요 일정과 3국 입장 및 업계 반응 주목

₩ 경제통상 동향

- (AI) 美, 엔비디아 H200 칩 對中 수출 허용···승인된 고객사에 특정 조건부 승인 4
- (무역) 美 대중 관세에도 제3국 우회·가격 경쟁력으로 중국 제조업 수출 확대 지속 5
- (예산) '26년 美 국방수권법 최종안 공개···대중국 해외투자 제한 및 방산 공급망 강화 6
- (관세) 美 하원, CBP 반덤핑·상계관세 회피 조사 권한 부여 법안 추진 7

⚖️ 의회법안 동향

- 반도체, 무역, 중국견제 등 8

💬 이시각 헤드라인

-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11
-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12

📅 워싱턴 D.C. 주요일정

12.9(화)	• 11월 NFIB 소기업 경기낙관지수(NFIB optimism index)
12.10(수)	• 미 연준 FOMC 기준금리 결정(FOMC interest-rate decision)
12.11(목)	• 12월 1주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(Initial jobless claims)
12.12(금)	• 9월 도매 재고(Wholesale inventories)

◎ 워싱턴 D.C. 포커스

(USMCA) 美, 2026년 USMCA 재검토 주요 일정 및 이해관계자 주요 의견

1. 개요

□ USMCA 운영평가 공청회 및 재검토 관련 주요 일정

- 2026년 USMCA 공동재검토 대비 공청회 마무리 및 USTR 보고서 제출 예정
 - 미 무역대표부(USTR)는 2026년 7월 1일 예정된 USMCA(미국·멕시코·캐나다 협정) 첫 6년 공동재검토를 앞두고 12월 초 3일간 공청회를 개최하여 협정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함.
 - 디지털, 노동,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 이해관계자가 협정 운영 평가 및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으며, USTR은 내년 1월 초까지 협정 평가와 16년 연장에 대한 입장, 재검토 시 제안할 조치 등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
 - 3국이 2026년 공동재검토에서 16년 연장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, USMCA 규정에 따라 협정은 2036년 6월 단계적으로 종료 절차에 들어가며, 이 관련 미국 내 협정 탈퇴 또는 양자 FTA 전환 가능성 등 다양한 옵션이 논의 중

〈USMCA 재검토 주요 일정 및 전망〉

타임라인	구분	주요 내용	전망 및 평가
2026.7.1. (공동재검토)	2020.7.1. 협정 발효 및 6년 리뷰 규정 (링크)	- 미국·캐나다·멕시코 3국이 운영 평가 - 16년 연장 여부 향후 검토 주기 결정	- 북미 통상·투자 환경의 분기점 - 연장 방식에 따라 10년(2036년) 만료 경로 여부 결정
2025.10월 이후	美 국내 절차 공청회·의견수렴	- USTR, 공청회·서면 의견수렴 개시 - 산업계·노동·시민사회·테크 등 참여	- “기본틀 유지+부분 개선” vs “노동·디지털 등 전면 재검토” 입장 차이 존재
2026.1초 (법정 시한 1월 2일 ~ 3월 경)	美 USTR 보고서 제출	- 공동재검토 180일 전까지 의회에 평가·연장 입장·협상 목표 보고	- 美 공식 협상 입장 가능 자료 - 공개 시점나용에 따라 시장 불확실성 존재
2026.7.1	3국 공동재검토 회의	- 16년 연장, 일부 수정 후 연장, 연장 보류(연례 재검토) 중 선택	- 대체로 “연장·부분 개정” 가능성에 무게 - 美의 탈퇴·양자 FTA 시사로 정치·협상 리스크 상존
2026~2036년	이후 시나리오 (연장 미합의 시)	- 연장 합의 실패 시 매년 재검토 수순 - 2036.7.1 협정 종료 가능	- 상시적 제도 불확실성으로 북미 장기 설비투자·공급망 재편에 부 담 요인으로 작용

[자료: 현지 언론 및 Thinktank 자료 종합]

2. 상 세

□ USMCA 공동재검토 관련 3국의 입장과 업계 반응

• 미국·캐나다·멕시코 3국 입장

- (미국) 미국 내 산업계와 주요 연구기관은 USMCA를 북미 공급망·대중 경제의 기본 틀로 평가하면서, 협정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디지털, 노동, 경제 안보 등 일부 조항을 보완·강화하는 방향을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
 - * 트럼프 행정부는 부분 개정, 협정 탈퇴, 양자 FTA 전환 등 다양한 옵션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 제기
- (캐나다) 캐나다 정부와 경제단체는 대미 수출 및 투자 안정성 측면에서 USMCA 연장을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, 협정의 전면 재협상보다는 기존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기술적·부분적 조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짐.
 - * 디지털 규제, 문화·환경·기후 정책 등 분야는 캐나다의 정책 자율성 유지 강조
- (멕시코) 멕시코 정부는 제조·자동차·농산물 등 對미 수출과 투자유치, 일자리 측면에서 USMCA 의존도가 높아 협정 유지·연장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.
 - * 에너지 정책, 임금·노동 개혁 속도 등에서 멕시코 자국의 정책 여지 중시

• 디지털·노동·에너지 등 업계·분야별 주요 의견

- (테크 업계) 소비자기술협회, CCIA, BSA 등은 USMCA 디지털 무역 규범 유지·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, 인공지능(AI)·양자컴퓨팅 등 별도 부속서 신설과 북미 내 AI 핵심 투입제한에 대한 선호적 접근 보장 등 제안
- (노동 분야) AFL-CIO, USW 등은 USMCA 발효 이후 對멕시코 상품수지 적자 확대, 임금 격차 지속, 보호노조 중심 구조 유지 등을 지적, 현 단계에서의 16년 조기 연장에 부정적 입장 표명, 멕시코의 노동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시설별 신속대응 메커니즘(RRM) 강화와 더 엄격한 원산지 규정 등 요구
- (에너지) 해당 업계는 멕시코의 재생에너지 투자 제한, 네트워크 접속 문제 등 우려, USMCA 재검토를 계기로 에너지 분야 투자장벽 완화와 일부 핵심 부품의 관세·수입제한 완화(232조 관세 예외 확대)를 요청

▪ 작성자	워싱턴 D.C. 무역관 김준희
▪ 자료원	폴리티코(12.8), 인사이드(12.8), 브루킹스(12.9), Baker (12.2), CSIS (8.18)

(AI) 美, 엔비디아 H200 칩 對中 수출 허용···승인된 고객사에 특정 조건부 승인

- (개요) 국가안보 심사 통과한 승인된 고객사에 한정, 미 정부 25% 수수료 부과
 -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매출의 25%를 수수료를 징수하는 조건으로 엔비디아(Nvidia)가 H200 AI 칩을 중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발표(12.8)
* H200 칩 수출은 국가안보 심사를 통과한 승인된 기업에 한정
- (상세) 최첨단 AI 칩은 수출 대상 제외, 향후 AMD·인텔 등도 유사한 협정 예상
 - 수출 허용 대상에서 블랙웰(Blackwell) 칩·출시 예정 루빈(Rubin) 등 차세대 고급 칩이 제외되면서, 최첨단 AI 하드웨어 수출 제한 기조 유지
 - 상무부가 이번 합의 세부 사항을 마무리 중이며, 동일한 방식의 조치가 에이엠디(AMD)·인텔 등 다른 미국 AI 칩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
 - 美 의회 상원에서는 H200 칩을 포함한 對中 칩 수출을 30개월간 행정부가 승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반도체 수출 반대
 - 중국은 반도체 자립 전략에 따라 자국산 AI 칩 개발 중이며, 국내 칩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공 부문의 H200 칩 구매 금지 방안 등을 논의 중
- (반응) 미국·중국 업계는 환영, 민주당·안보 전문가는 반발
 - 미국 AI 칩 개발사와 알리바바·바이트댄스·텐센트 등 중국 기술 대기업에서는 환영
 - 미 의회·안보전문가·민주당 의원들은 중국의 군사·감시 기술 향상으로 인한 국가 안보 우려와 기술 복제로 인한 자국 칩 개발사의 경쟁력 약화 초래 우려 제기
 - 중국은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히며 규제 완화를 환영하지만, 자국산 칩 개발은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

▪ 작성자 워싱턴 D.C. 무역관 김기범

▪ 자료원 [폴리티코\(12.8\)](#), [로이터\(12.9\)](#), [FT\(12.9\)](#)

(무역) 美 대중 관세에도 제3국 우회·가격 경쟁력으로 중국 제조업 수출 확대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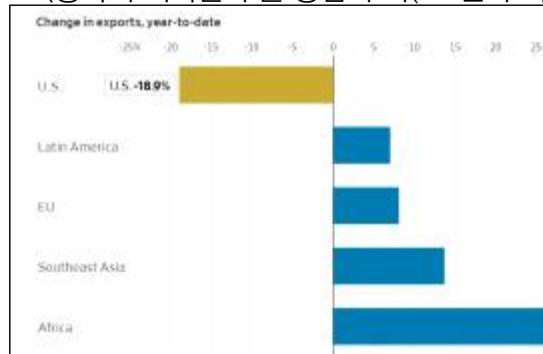
• (개요) 미국의 관세 강화에도 중국 제조업 생산·무역수지 사상 최고치 경신

- 중국은 '25년 1~10월 제조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7% 증가하고, '25년 11월 누적 기준 상품 무역수지 흑자가 약 1.1조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
-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, 중국은 대미 수출 감소분을 아시아·EU·중남미·아프리카 등 제3국 수출 확대를 통해 보완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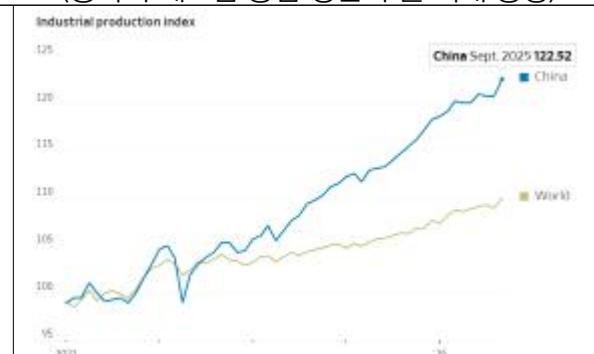
• (상세) 대미 수출 감소에도 제3국 수출 확대·가격 경쟁력으로 수출 구조 재편

- '25년 1~11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약 19% 감소하였으나, 동남아·EU·중남미·아프리카 등 제3국 수출이 확대되며 지역 다변화를 통한 수출 구조 재편 진행
- 중국산 일부 수출 물량이 제3국 최종 조립 후 미국으로 재유입되는 우회 수출을 통해 대중 관세 부담을 회피함으로써, 미국 관세 정책의 실효성이 제한되는 양상
- ▲ 위안화 실질 약세, ▲ 디플레이션에 따른 가격 인하, ▲ 대규모 산업 설비 확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국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강화되는 추세

〈중국의 지역별 수출 증감 추이(25년 누적)〉



〈중국의 제조업 중심 생산·수출 확대 동향〉



[자료: 고용통계국, WSJ 인용]

• (전망) 중국의 제조업 기반 성장 전략 지속 및 글로벌 제조업 내 비중 확대

- 중국은 차기 5개년 계획을 통해 첨단 제조, 반도체·AI 등 전략산업의 기술 자립도 제고를 국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, 제조업 기반 성장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추진
- '25년 기준 중국의 제조업 흑자는 약 2조 달러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, 글로벌 제조업 내 중국의 구조적 비중이 중장기적으로 유지·확대될 가능성 시사

▪ 작성자 워싱턴 D.C. 무역관 정연호

▪ 자료원 WSJ([12.8](#)), 뉴욕타임스([12.7](#))

(예산) '26년 美 국방수권법 최종안 공개··대중국 해외투자 제한 및 방산 공급망 강화

- (개요) 미 의회, 2026 회계연도 최종 국방수권법(NDAA) 예산 전문 공개

-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약 8,926억 달러보다 약 80억 달러 증액된 약 9,006억 달러 수준의 2026년 미 국방수권법 최종안* 공개(12.7)

- *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타결안은 시리아 제재 전면 해제, 대중(對中) 투자 규제,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2년 연장 등 포함, 군 주택·IVF·대형 주택법·일부 암호화폐 규제 등은 상당 부분 축소

- (상세) 미국의 중국 전략적 기술 부문 해외투자 제한 및 방위산업 공급망 강화 포함

- (해외투자 금지 대상 확대) 기존 ECCN 기술별 세부 구분* 대신, 부문별(sector-based) 접근 채택, 중국 외에도 쿠바·이란·북한·러시아·베네수엘라 포함 금지대상을 확대

- * 수출통제분류번호(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) 기반

- 해외투자 금지 기술(Prohibited Technologies)'부문에 △첨단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, △인공지능 시스템, △양자정보기술, △고성능 및 초고속컴퓨팅 △극초음속 기술 포함

- 재무부 권한 강화로 재무장관은 미국인(및 통제 외국법인)의 금지기술 분야 국가안보 거래를 직·간접으로 금지할 수 있으며, 국익상 예외 허용 가능

- (방위산업 공급망 강화) 방위산업기금 사용 대상에 △핵심광물·소재·화학물질 등 15개 신규 품목 추가, △적성국(covered countries)'(중국·북한·러시아·이란·쿠바·베네수엘라) 내 활동 및 프로젝트에 방위산업기금 사용 불가

- △전략소재 회수·재사용 프로그램(Strategic Material Recovery and Reuse Program) 확대, △대중국 특정 광물(몰리브덴(Molybdenum)·갈륨(Gallium)·저마늄(Germanium)) 조달 금지 및 우려국 첨단소재(배터리·태양전지) 조달 제한, △중국 바이오테크 장비·서비스 구매 전면 금지

- 또한, 희토류 자석에 대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 지원 포함

■ 작성자	워싱턴 D.C. 무역관 문현주
■ 자료원	NDAA(링크), 인사이트(12.8)

(관세) 美 하원, CBP 반덤핑·상계관세 회피 조사 권한 부여 법안 추진

- (개요) 미 하원 의원들, 철강 산업 보호 위한 CBP 조사 권한 강화 촉구
 - 펜실베이니아주 출신 미 하원 의원 2명은 관세국경보호청(CBP)에 반덤핑(AD)·상계관세(CVD) 회피 혐의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
 - 외국 철강업체의 원가 이하 수출 및 가격 왜곡에 따른 미국 내 산업 피해를 차단하고,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한 집행력 강화를 주요 입법 취지로 제시
- (상세) ‘STEEL 법안’, CBP의 철강 관세 회피 직접 조사 권한 부여
 - 공화당 마이크 켈리 의원과 민주당 크리스 텔루지오 의원이 ‘STEEL 법안’을 발의, CBP가 회피 정황 포착 시 자체적으로 AD·CVD 회피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
 - 동 법안은 1930년 관세법 개정을 통해 CBP 조사 권한과 절차를 법률로 명문화하여, 기존 이해당사자 제소 중심의 회피 조사 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
 - 외국 철강업체의 덤팡·보조금 수출로 인한 미국 내 가격 왜곡 사례를 주요 대상으로, 미국 철강·튜브 등 핵심 제조업 기반 산업 보호를 입법 목표로 설정
 - 켈리 의원은 “STEEL 법안은 미국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, 무역 규범 미준수 외국 기업의 시장 참여는 단호히 배제 한다”라고 언급하며 강경 대응 의지 강조
- (반응) 업계, CBP 조사권 확대 법안 지지…무역사기 태스크포스와 연계 전망
 - 미국철강협회(AISI) 등 업계 단체는 사기·환적 등 방식으로 무역법을 회피해 온 위법 행위자에 대한 추가 집행 수단으로 평가하며, 동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 표명
 - ’25년 8월 출범한 미 행정부의 ‘무역사기 태스크포스(Trade Fraud Task Force)’와 CBP 조사 권한 확대 법안이 연계될 경우, 반덤핑·상계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형사·민사 집행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

▪ 작성자	워싱턴 D.C. 무역관 James Lee
▪ 자료원	InsideTrade (12.8), Mike Kelly의원실 (12.8)

▶ 의회법안 동향

구분 (현행일)	법안 (발의일)	대표 발의자	법안 및 주요 내용
국제 사기 (12.4)	H.R. 6425 (하) (12.4)	Gabe Amo (민)	<p>〈국가 사기 대응 전략법(National Strategy for Combating Scams Act of 2025)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미국 내 사기 피해를 줄이고, 연방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사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법안 FBI 국장 주도 하에 FTC, CFPB, DHS, 재무부 등 주요 연방 기관을 포함하는 ‘사기 대응 전략’ 개발을 위한 워킹 그룹 구성 및 국제 협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.
문화 교류 (12.4)	H.R. 6428 (하) (12.4)	Ami Bera (민)	<p>〈미국 교육/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여 보고 의무 법안(A bill to require the Secretary of State to submit a report on participation in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programs)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미 국무장관에게 미국의 교육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여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으로 미국의 외교, 전략적 영향력을 강화하고, 중국 등 경쟁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보고 대상 프로그램은 Fulbright program, Kennedy-Lugar Youth Exchange 등으로 중국이 후원한 교류 프로그램 참여자와 미국이 후원한 프로그램 참여자의 수, 전략적 영향 평가와 분석이 포함되어야 함.
사이버보안 (12.4)	H.R. 6429 (하) (12.4)	Shontel M. Brown (민)	<p>〈사이버 보안 인력 확대법(Expanding Cybersecurity Workforce Act of 2025)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(CISA)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
무역 집행 (12.4)	H.R. 6446 (하) (12.4)	Mike Kelly (공)	<p>〈무역 집행 강화 및 회피 규제 강화법(Strengthening Trade Enforcement and Evasion Limitations (STEEL) Act)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무역 집행을 강화하고, 외국이 보조금을 받은 상품을 미국 내 덤핑하여 미국 철강 및 관련 제품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불공정 무역 관행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
반도체 (12.4)	S.3374 (상) (12.4)	Pete Ricketts (공)	<p>〈2025년 안전하고 실행 가능한 반도체 수출 법(Secure and Feasible Exports (SAFE) Chips Act of 2025)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 중인 중국 대상 첨단 인공지능(AI) 칩 제한 조치를 법제화하여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강력한 수출 통제 시행, AI 발전을 주도하는 컴퓨팅

			<p>능력에서 미국의 리더십 극대화를 목적으로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법안은 상무장관에게 적대국에 대한 첨단 칩 수출 허가 신청을 최소 30개월 간 거부할 것을 지시. 30개월 이후에는 행정부에 기술적 기준을 재조정할 재량권 부여
중국 견제 (12.4)	H.R.6447 (하) (12.4)	Mike Kennedy (공)	<p>〈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제재법(Combatting China's Pilfering of Intellectual Property Act (CCP IP Act)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미국의 지식재산(IP) 침해에 관여한 중국 개인, 기업, 조직에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혁신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▪ John Curtis 상원의원이 2025년 1월 30일 발의한 법안 (S.330)과 동일한 법안임.
핵 군비경쟁 제한(12.4)	H.R. 6465 (하) S. 3356 (상) (12.4)	하원: James P. McGovern (민) 상원: Edward J. Markey (민)	<p>〈핵 군비 축소 대화 촉진법(Hastening Arms Limitation Talks (HALT) Act)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상/하원 동시 발의되었으며, 핵 군비 경쟁으로 인한 위협 축소 및 제거를 목적으로 핵무기 시험, 생산, 배치를 21 세기형으로 동결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법안
약가 인하 (12.4)	H. Res. 928 (하) (12.4)	Debbie Dingell (민)	<p>〈미국 환자를 위한 최혜국 대우 약가 정책 지지 결의안 (Affirming support for most-favored-Nation drug pricing for United States patients)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미국 환자들이 동일한 약품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지하는 결의안
이민법 (12.4)	S. 3348 (상) (12.4)	Richard J. Durbin (민)	<p>〈드림법(Dream Act of 2025)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어린 시절 미국에 들어왔지만 합법적 신분이 없는 비시민권자 중 특정 교육, 군 복무, 취업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 (Dreamers)에게 영주권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으로 2001년 이후 매 회기 동일한 법안을 발의됨
이중 국적 (12.5)	H.R.6486 (하) (12.5)	Abraham Hamadeh (공)	<p>〈국적 명확화 법 Make Allegiances Clear Act(MACA Act)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인구조사국이 인구조사를 통해 이중국적 보유 여부를 조사하는 법안으로 국가안보, 이민, 선거 적격성 문제를 분석해 국민의 해외 관계 투명성 확보
적대국 견제 (12.5)	H.R.6487 (하) (12.5)	Pat Harrington (공)	<p>〈이공계 교육 및 경쟁력 강화 법(SECURE STEM Act)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중국, 러시아, 이란, 북한, 쿠바 국적자의 미국 내 민감한 STEM(과학·기술·공학·수학) 분야 특정 비자를 금지 ▪ 특히 중국(CCP) 연계 연구자료 및 기술 유출, 생물 물질 밀반입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
관세 (12.5)	H.R.6496 (하) (12.5)	Mike Thompson (민)	<p>〈농산물 관세 보전 지원법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농무부 장관이 관세 부담 증가로 손실 입은 특정 원예작물 자배자와 외인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

약가 인하 (12.5)	H.R. 6485 (하) (12.5)	Ben Cline (공)	<p>〈스킨니 라벨을 통한 약가 인하법(Skinny Labels, Big Savings Act)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네릭 제조업체가 스키니 라벨 사용 시* 용도특허 침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특허권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환자, 보험사, 납세자 모두에게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<p>*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체가 특허가 만료된 용도에 대해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도구</p>
이민 단속 (12.5)	H.R. 6493 (하) (12.5)	Seth Moulton (민)	<p>〈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위헌행위 감독집행법(National Oversight and Enforcement of Misconduct (NOEM) Act)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방 이민단속 요원이 저지를 헌법 위반 행위의 피해자가 연방법원에서 해당 요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

* 미국 동부 시간 12월 9일 15시 모니터링 기준

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

언론사	주요 보도내역
The Wall Street Journal	<p>Former Honduran President Pardoned by Trump Has Arrest Warrant at Home (트럼프 사면 前 온두라스 대통령, 자국서 체포영장 발부)</p> <p>올란도 에르난데스 전 온두라스 대통령은 400톤의 코카인 밀수 혐의로 4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사면. 온두라스 법무장관은 석방될 경우를 대비해 발부했던 부패혐의 체포영장 사진을 X에 게시하며 인터폴에 체포 요청</p>
The Washington Post	<p>The Supreme Court's major cases during the 2025–2026 term (2025–2026 대법원 회기 주요 심리 사건)</p> <p>남은 이번 회기에서 대법원은 웨스트버지니아주 여성 스포츠 트렌스젠더 선수 출전 허용, 하와이 총기 휴대,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리사 쿡 해임 가능 여부 등을 심리할 예정</p>
The New York Times	<p>Supreme Court Grapples With Whether to Lift Campaign Finance Limits (대법원, 선거자금 제한 폐지 고심 중)</p> <p>연방 대법원은 선거자금 제한 폐지 여부를 심리 중으로, 일부 대법관은 대법원이 의회가 제정한 선거자금법에 깊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를 제기해</p>
CNN	<p>Millions of Australian children just lost access to social media (호주 어린이들은 더 이상 소셜미디어 못 해)</p> <p>내일(10일)부터 16세 미만 호주 어린이들은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, 스냅챗,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로부터 차단돼. 부모, 이용자는 처벌대상이 아니며,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개설을 막지 않는 플랫폼에는 4,950만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</p>
USA Today	<p>More shoppers admit to stealing from self-checkout. What do they take? (셀프 계산대 절도범은 무엇을 훔쳤을까?)</p> <p>조사에 따르면 더 많은 쇼핑객들이 셀프 계산대에서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필수품과 관세로 가격이 인상된 식료품 등을 훔치고 있다고 답변해. 특히, M세대 쇼핑객 중 41%, Z세대는 37%가 최소 한 번 이상 셀프 계산대에서 고의로 물건을 훔쳤다고 응답</p>

* 미국 동부 시간 12월 9일 16시 기준

워싱턴 D.C. 무역관 공지사항

◆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, [경제통상리포트](#) (과거 리포트 : [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5-44	美-中 반도체 디커플링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	2025.12월
US25-43	트럼프 정부, 미국형 소버린 AI 구축을 위한 『제네시스 미션』 출범	2025.12월
US25-42	美 연방 대법원 IEEPA 관세 재판 동향 및 트럼프 관세 플랜 B 전망	2025.11월
US25-41	美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및 예산 합의 관련 주요 동향	2025.11월
US25-40	IMF 세계경제전망(WEO) 발표 및 주요 시사점	2025.11월
US25-39	미국 중·대형 트럭 신규 관세 조치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5.10월
US25-38	美 무역전쟁이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에 미치는 영향 분석	2025.10월
US25-37	美 특허의약품 관세 정책 추진 및 제약사별 대응 동향	2025.10월
US25-36	미국 정부의 관세 위반 단속 강화 추세와 향후 전망	2025.09월
US25-35	미국 연준 금리 인하 발표 및 하반기 경제 전망 변화	2025.09월
US25-34	'25년 2분기 美 청정에너지 투자 동향과 정책 환경 영향	2025.09월
US25-33	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5.09월
US25-32	트럼프 관세로 인한 미국 무역 구조 변화 ('25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)	2025.08월
US25-31	미국의 희토류 공급망 자립 정책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5.08월
US25-30	미 풀리실리콘 232조 조사 관련 의견수렴 주요 내용	2025.08월

◆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, [코트라 인터뷰 시리즈](#) (과거 인터뷰 : [유튜브 KOTRA TV](#))

인터뷰번호	제목	바로가기
코인사-23 (2025.8.26.)		
코인사-22 (2025.5.13.)		

문의	이메일	전화
	seogil.chang@kotra.or.kr	+1) 202-857-7919
	jwshim@kotra.or.kr	